

의안  
번호

1219

##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6. 2. 1.(월)
- 나. 제 출 자 : 이복희외 5명
- 다. 위원회회부 : 2016. 2. 4.(목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6. 2. 18.(목)

### 2. 제정이유

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다. 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라. 안전도시 추진사업의 범위,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  -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,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
  -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전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음
- 마.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 - 구청장은 안전도시사업의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안전도시협의회를 설치·운영함
- 바. 안전도시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  - 안전도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

### 4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### 5. 검토의견

- 「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, 효율적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 〈 관 계 법 령 〉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**제2조(기본이념)**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, 모든 국민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 〈 참 고 사 항 〉

### □ 세계보건기구(WHO) 국제안전도시 공인

- 개념: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·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
- 공인기관: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
- 공인절차: 지역사회 손상진단 → 공인준비도시 등재 → 안전증진사업 수행 → 공인신청 → 평가(서면·현지실사) → 공인
- 공인현황: 국내 10개 자치단체 공인
  - 제주, 수원, 서울강북, 서울송파, 원주, 천안, 과천, 삼척, 창원, 부산
  - 울산남구
  - ※ 공인준비 중인 자치단체(8개)
    - 광주, 경기도, 순천, 구미, 거창, 세종, 전주
- 공인기준
  - 1) 손상빈도 및 원인 규명 프로그램 운영
  - 2) 지역 내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 기반 구축
  - 3) 고위험 계층·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  - 4) 장기·지속적인 손상예방 프로그램 시행
  - 5)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
  - 6) 손상예방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
  - 7) 국내·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의 지속적 참여